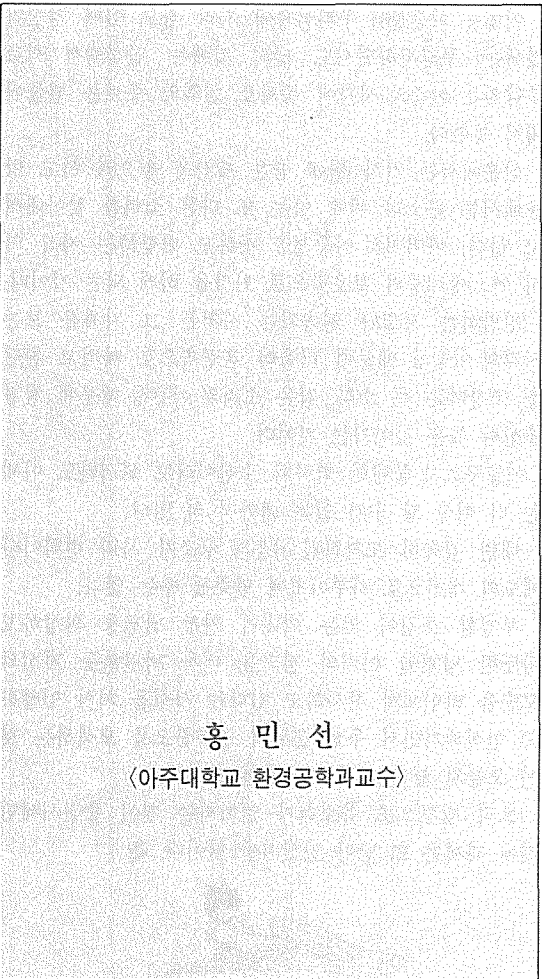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70년대 이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조밀지역의 환경오염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무연휘발유 사용과 촉매환원장치 장착의 의무화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홍민선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교수)

정부 차원의 노력은 최근 몇년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 각자 및 일반배출업소의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당국의 홍보부족, 비공개적 환경정책 그리고 피해에 대한 공동의식부족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정수기 제작회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자연수 및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 가정이 점증하고 있으나, 식수로서 수도물의 적부를 공개적으로 가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각자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제13대 대통령선거시 환경개선에 관한 공약이 거의 없었고, 88년에는 700여 억원이었던 환경청예산이 89년에는 560여억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는 사실과 환경보존시설 투자비가 GNP의 0.03%로 선진국의 0.5~2%에 훨씬 밀돌고 있다는 데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업무가 15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를 총괄하는 환경청이 타상위부처와의 마찰에서 양보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짐작된다. 최근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결정은 효율적인 환경업무수행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효율적인 환경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환경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해 보겠다.

첫째, 환경관련부서 종사자는 기업의 이윤을 상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체로부터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환경문제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환경업무는 경제활동의 성과를 상쇄시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인사 및 인책권을 해당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 불특정다수를 위한 방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환경관련업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전문인력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환경관련업무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외국의 경우 대학원에서 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중점을 두어서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우며, 중소 및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사1·2급 자격증을 환경과 전혀 무관한 직종종사자에게 취득케 하여 법적인 수요만 충족시켜서 정규교육을 받은 인력의 진출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환경관련분야는 대학원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사자격 시험에서는 정규환경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문제는 대상영역이 광범위하며,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여러 분야의 기술이 보조를 맞추며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분야에 비해 대기질 관리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나서 소멸될 때까지의 과정은 각 오염물질의 특성, 지형 및 기상조건등의 영향을 받으며, 배출지역 및 인근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실측과 이론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日本의 경우 東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옥시단트가 이동해서 서부산악지방의 삼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모델링 연구가 8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으며, 西獨의 경우도 삼림과 호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주변국가로부터의 오염물질유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적, 이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염물질의 이동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터의 배출량 및 향후 배출증가율, 기상조건, 지형등을 고려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일례로 1989년 9월부터 서울지역의 아파트 난방연료를 병커-C油에서 LNG와 경질유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지역과 범위를 점차 확장하기로 하였던 바, 이는 서울지역 대기질개선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여야 할 일이지만, 병행하여 그에 따른 대기질개선의 범위를 규명할 수 있는 대기질관리기술의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만 향후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석유의 운송 및 저장시 배출되는 휘발성 대기오염물질의 검출 및 분석, 대기중에서의 광화학반응, 방지기기의 개발과 이용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는 연료의 대체와 관련기술의 수입·보완에 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경보존정책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업체별로 환경분야에 대한 기금을 축적해 연구소나 대학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과, 관리 기술 등을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상쇄시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자발적 투자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므로 업체별로 기금을 축적해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업체는 타이어와 도로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정유업체는 휘발성 탄소화합물의 배출저감과 2차오염물 생성메커니즘의 규명 그리고 피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며, 비교적 노후에 관한 환경관련기술의 도입 및 보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홍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여 그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하며, 환경관련업무 전문종사자의 양성과 운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환경관련 연구소와 대학에 여러 분야의 환경관련기술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배출업체의 기금과 정부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